

제39호

발행일 2021. 6. 1.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Contents

01 | 코로나19 시대의
장애인지문화사업 1p
책임연구원 남영우(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02 | 경상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현황 및 체계 구축방안 8p
책임연구원 김동화(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윤상용(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송아영(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이옥열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1
홈 페이지 www.ghf.or.kr

경북행복 Brief

01

코로나19 시대의 장애인지문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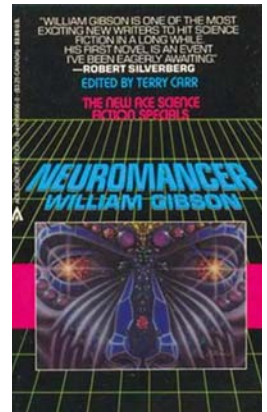
1. 장애인지문화사업

■ 1984년에 발표된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소설 『뉴로맨서 Neuromancer』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비롯한 모든 것이 비트(bit) 단위의 정보로 환산되는 미래사회가 등장함(위준호, 2004).

■ 소설 속 가상의 공간인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현재의 인터넷을 연상케 하는데,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는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의 한 단면임.

■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흔히 제시되는 저질 정보의 범람이나 개인정보의 노출 등도 심각한 문제지만, 정보격차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보화가 모든 사용자 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정보기술에 의한 부자와 빈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층을 초래할 수 있음(이성일, 2002).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정보화사업은 정보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사업을 의미함.
- 현재 경상북도에서 보조하고 있는 장애인정보화사업은 시·군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 도 장애인 정보화지원사업, 교통장애인 정보화사업 등이 있음.



경상북도 장애인정보화사업

사업구분 ▶ 경상북도 자체사업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배경 및 목적

- ▶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정보접근이 낮은 장애인에게 컴퓨터 등 관련 상담 및 방문도우미 등 지원을 통하여 자립역량 강화
- ▶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사회참여와 관련 직종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활자립에 도모

사업대상 ▶ 도내 장애인

사업내용

- ▶ 컴퓨터 관련 상담, 방문 수리, 인터넷 사용방법 안내 등
- ▶ 컴퓨터교실, 정보화경진대회 등

사업량 ▶ 12개소(시·군 장애인 정보화지원사업 10개소, 도 장애인 정보화지원사업 1개소, 교통장애인 정보화사업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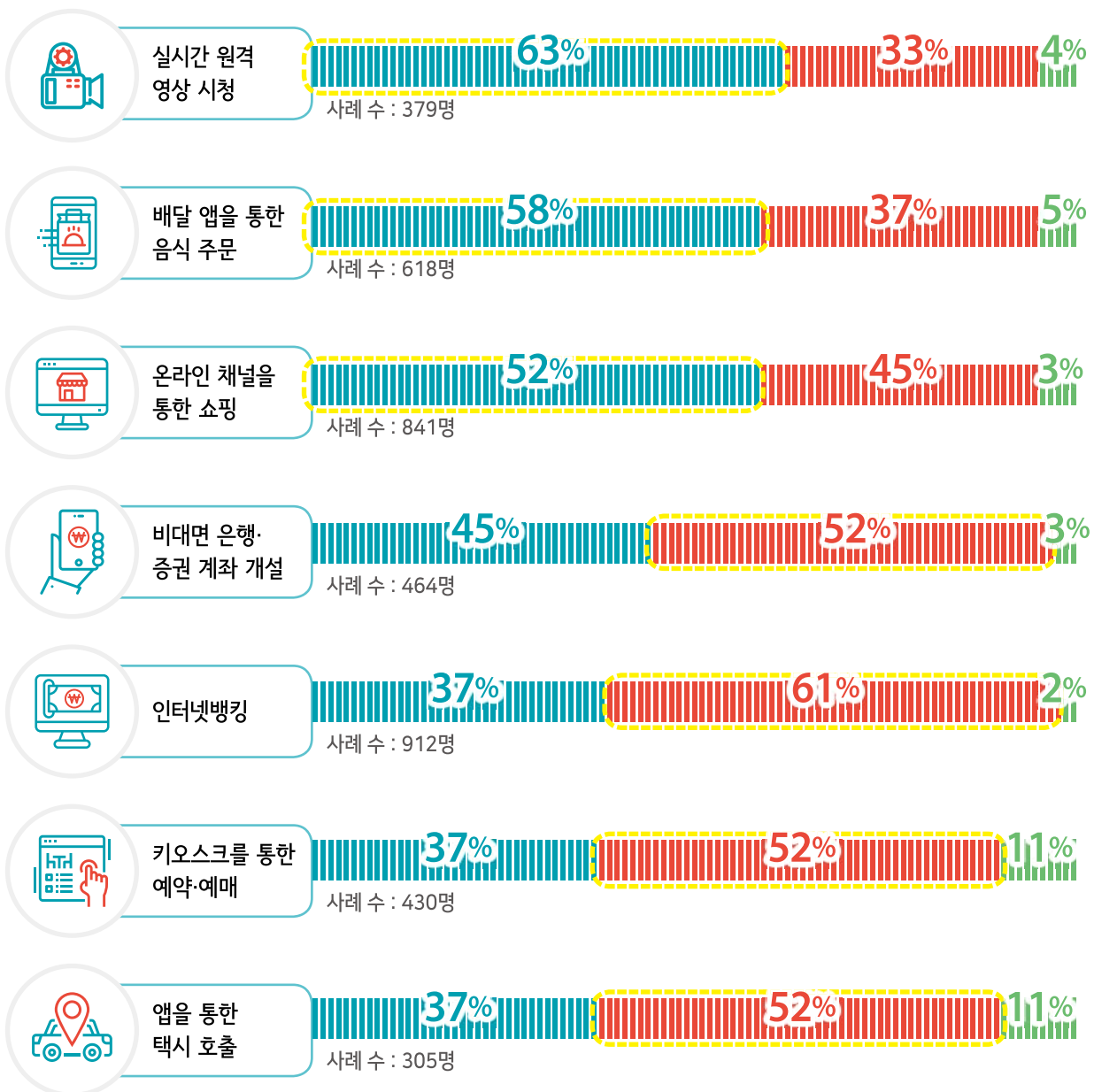
2. 코로나19와 장애인정보화사업

1)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변화

(1)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
- 외부활동 자제, 디지털 기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
- 고연령층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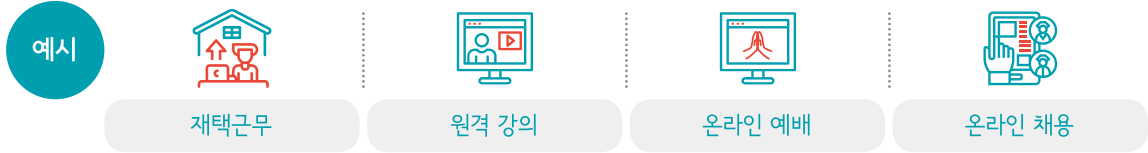
● 늘었다 / ● 이전과 비슷하다 / ●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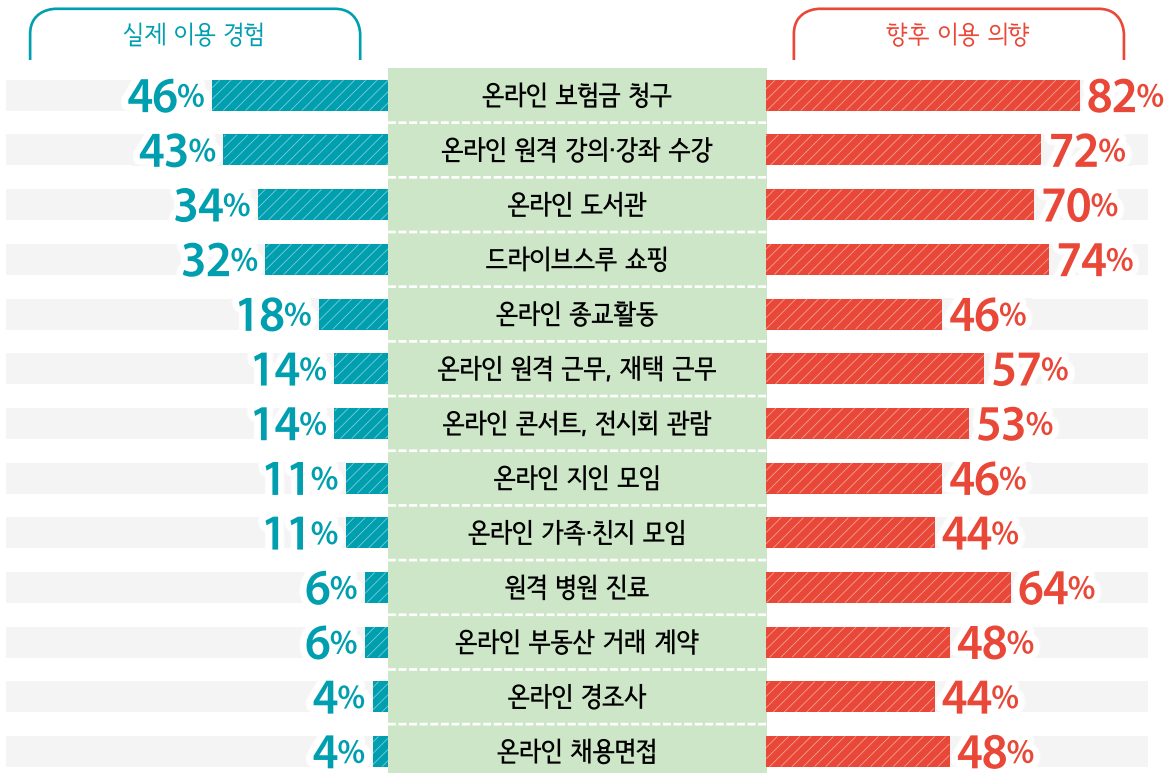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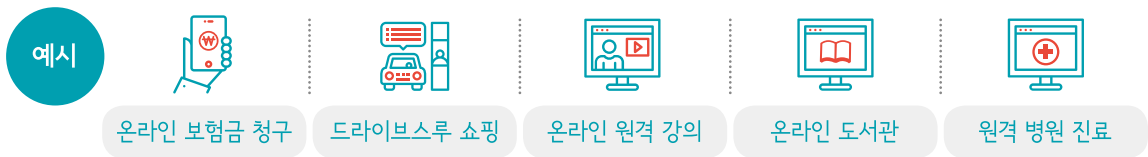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이용 변화

(2)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함.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일상에서 온라인 보험금 청구, 드라이브스루 쇼핑, 원격 강의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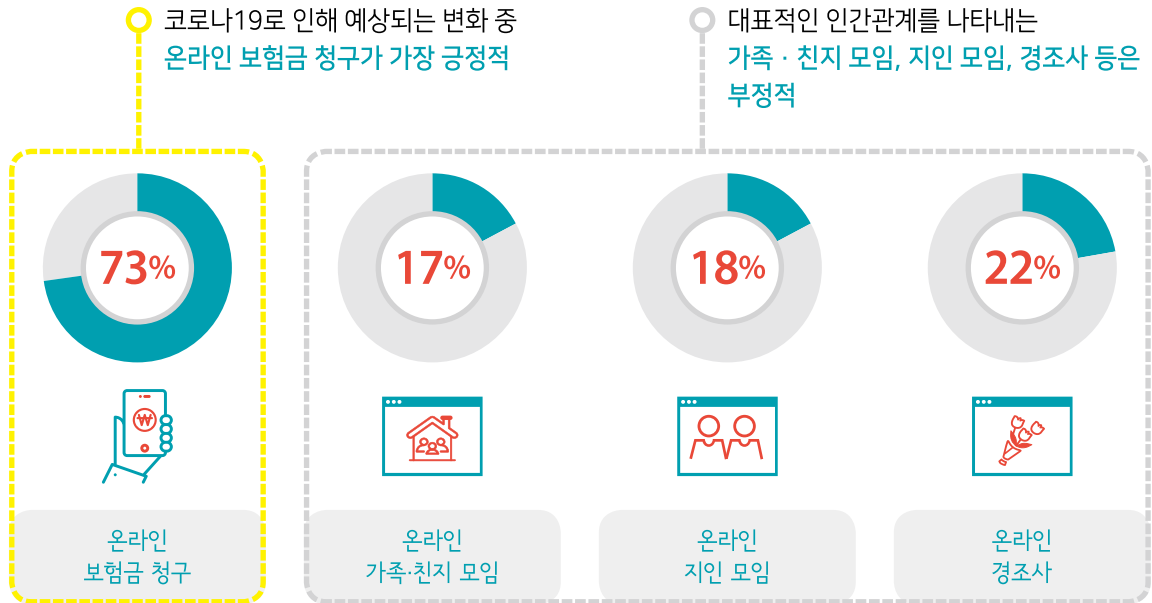


[그림 2] 비대면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의향

■ 향후 비대면 이용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의료,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 순으로 나타남.



(3) 가족·사회적 관계의 비대면 소통은 회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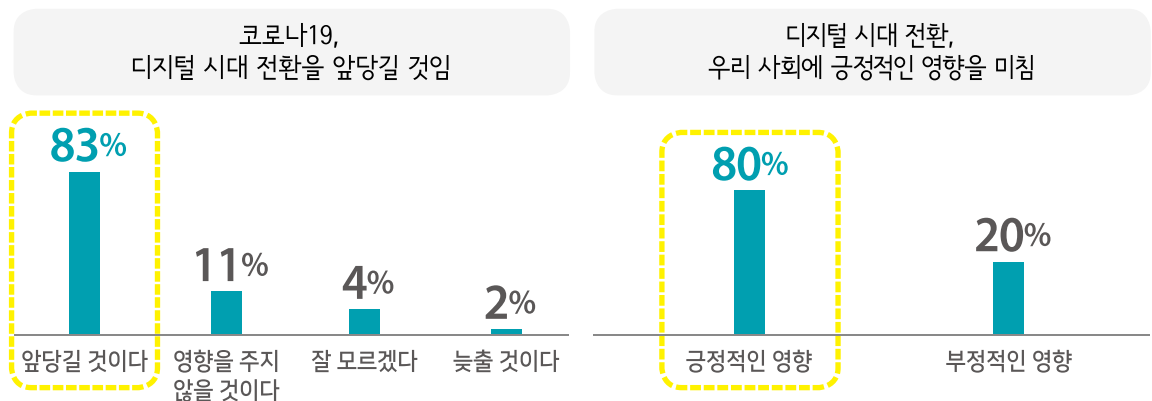


[그림 3] 긍정적·부정적 온라인 비대면 활동

2) 코로나19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1) 코로나19 이후 빠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 코로나19가 대면 활동을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시키면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함.



[그림 4]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 전환 예상

(2) 디지털 시대에 따른 정보격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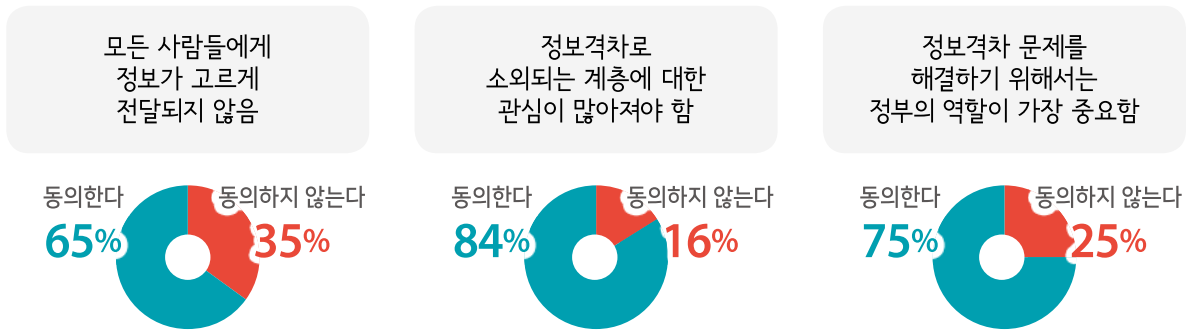
■ 디지털 기기나 관련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정보격차는 심각함.



■ 코로나19가 정보격차 문제를 심화시킬 것임.



■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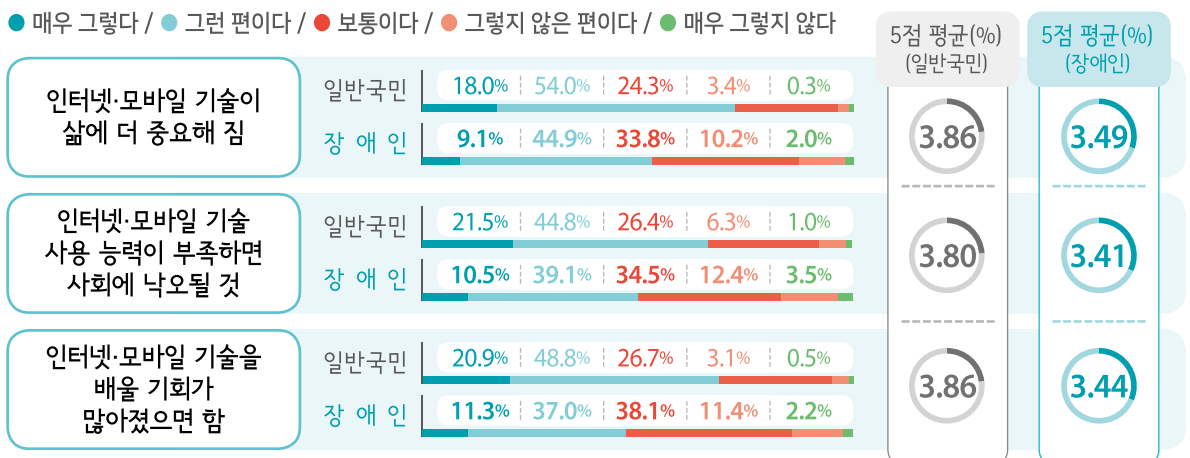
[그림 5] 정보격차에 대한 의견

3)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정보 서비스별 이용량 변화 조사 결과,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항목이 37.5% (매우 많이 늘었다 또는 늘어난 편이다)로 가장 높았고, '사회참여'는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터넷·모바일 기술 관련 태도 변화 조사 결과, '인터넷·모바일 기술이 삶에 더 중요해 짐'에서 54.0%가 '동의'(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 '인터넷·모바일 기술 사용 능력 부족하면 사회에 낙오될 것'은 49.6%, '인터넷·모바일 기술 배울 기회가 많아졌으면 함'은 48.3%가 동의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 ● 그런 편이다 / ● 보통이다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매우 그렇지 않다



자료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그림 6]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모바일 기술 태도 변화

3. 코로나19 시대의 장애인정보화사업 방향

- ① 비대면 장애인정보화 서비스 확대
- ② 개별화된 서비스와 소규모 모임 욕구 증가
- ③ 위기 상황 속에서의 대응지침 강화 및 관련 기관 및 시설 간 연계 강화
- ④ 온라인 동영상이나 실시간 온라인 방송 등을 활용한 서비스 다변화
- ⑤ 휴관이 아닌 협회 및 각 지회의 위기 상황 운영에 대한 공식화와 지침 필요
- ⑥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망 마련
- ⑦ 코로나19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인, 가족, 사회 문제에 대한 역량 강화

❖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20).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위준호. (2004). 윌리엄 김슨의 『뉴로맨서』에 나타난 사이버펑크 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일. (2002). 장애인 정보화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접근방법. 현장특수교육.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https://hrcopinion.co.kr/>
- ※ 본 브리프는 경북행복재단(2020)에서 연구된 '장애인정보화사업 평가' 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SPECIAL COMMENT 코로나19 시대의 장애인정보화사업



박 선 하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삶의 형태가 비대면(untact)으로 급속히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더욱 큰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 접근성과 정보 용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을 제언한다.

첫째, 정보화기기 지원의 확대와 장애유형별 맞춤 정보화교육사업 필요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나 스마트폰 보유율이 최근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유형별 보유율과 이용률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PC 등 정보화기기와 각종 이용료(전화 요금, 데이터 요금 등)의 도비 추가 지원과,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의 확대 진행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화사업에서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절실

장애인들은 다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얻은 정보를 재가공하여 심화하는 역량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신체적·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제한된 정보만 얻거나, 그조차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정보 획득의 결핍이 구조화된다면 정보화 결핍으로 인한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 개발 등 누구나 제약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정보화사업에서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구현이 절실해 보인다.

02

경상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현황 및 체계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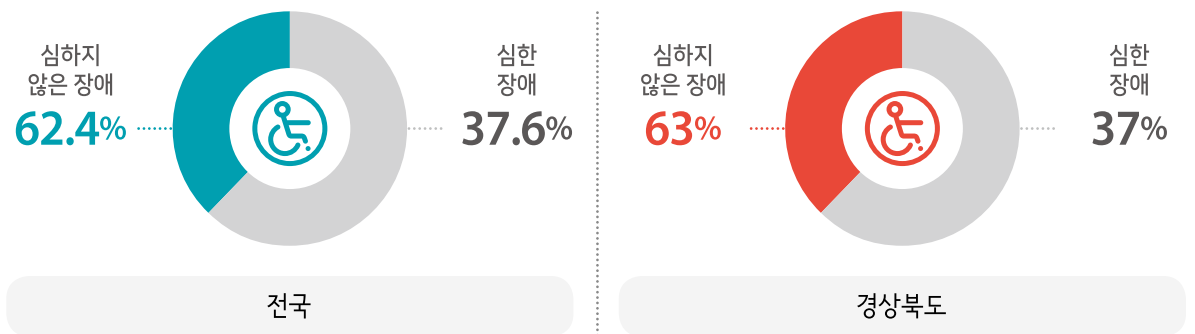
1. 서론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보호와 재활'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로 전환되고 있음.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과 탈시설을 장애 정책 핵심 의제로 최초로 올려놓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음.
-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완성 단계에 있는 탈시설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되고 있으며, 시설에서의 탈시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기본적인 여건과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나,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준비 없이 정책적 기조로서의 탈시설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들(국정계획, 5차 종합계획, 커뮤니티 케어 등)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를 정책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생활 의미는 더욱 확장되고 있음.
- 이에, 경북 장애인 자립 관련 현황, 타 시·도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정책 등을 통해 자립생활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경북의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준비 및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경북 장애인 현황 및 정책

1) 경북 장애인 현황

- 경북 장애인은 180,898명으로 전국 대비 6.9%이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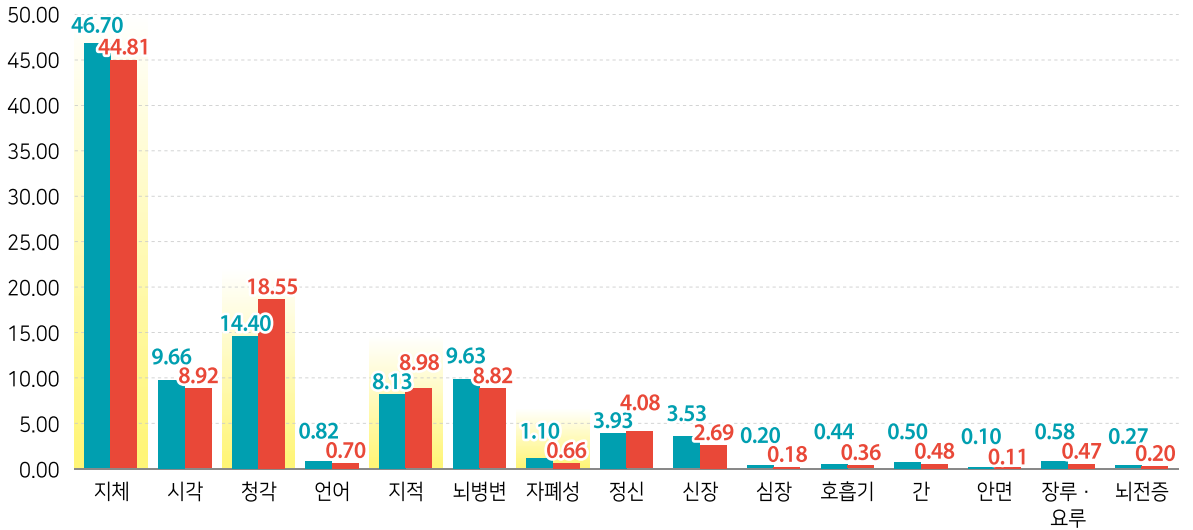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9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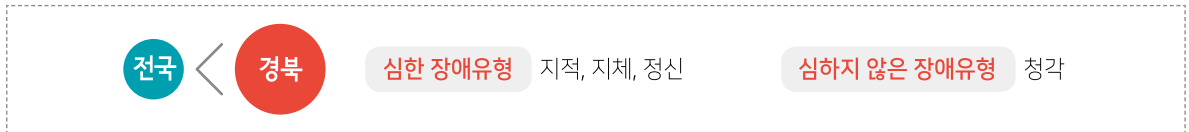
[그림 7] 전국 및 경북 장애인 현황

- 경북 장애유형은 지체 44.81%, 청각 18.55%, 발달장애 9.64%(지적 8.98%, 자폐성 0.66%), 시각 8.92%, 뇌병변 8.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8] 전국 및 경북 장애유형별 현황



- 경북의 장애인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노년기(65세 이상) 53.85%, 성인기 중 50~64세가 27.45%, 23~49세가 15.16%, 학령기(7~18세) 2.01%, 19~22세가 1.12%, 영유아기(0~6세)가 0.41% 순으로 나타남.

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 현황

- '20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18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서울 281개소, 경상남도 95개소, 경상북도 92개소(4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소자 현황에서도 경기도 5,970명, 서울 3,654명, 경상북도 2,561명(3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북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입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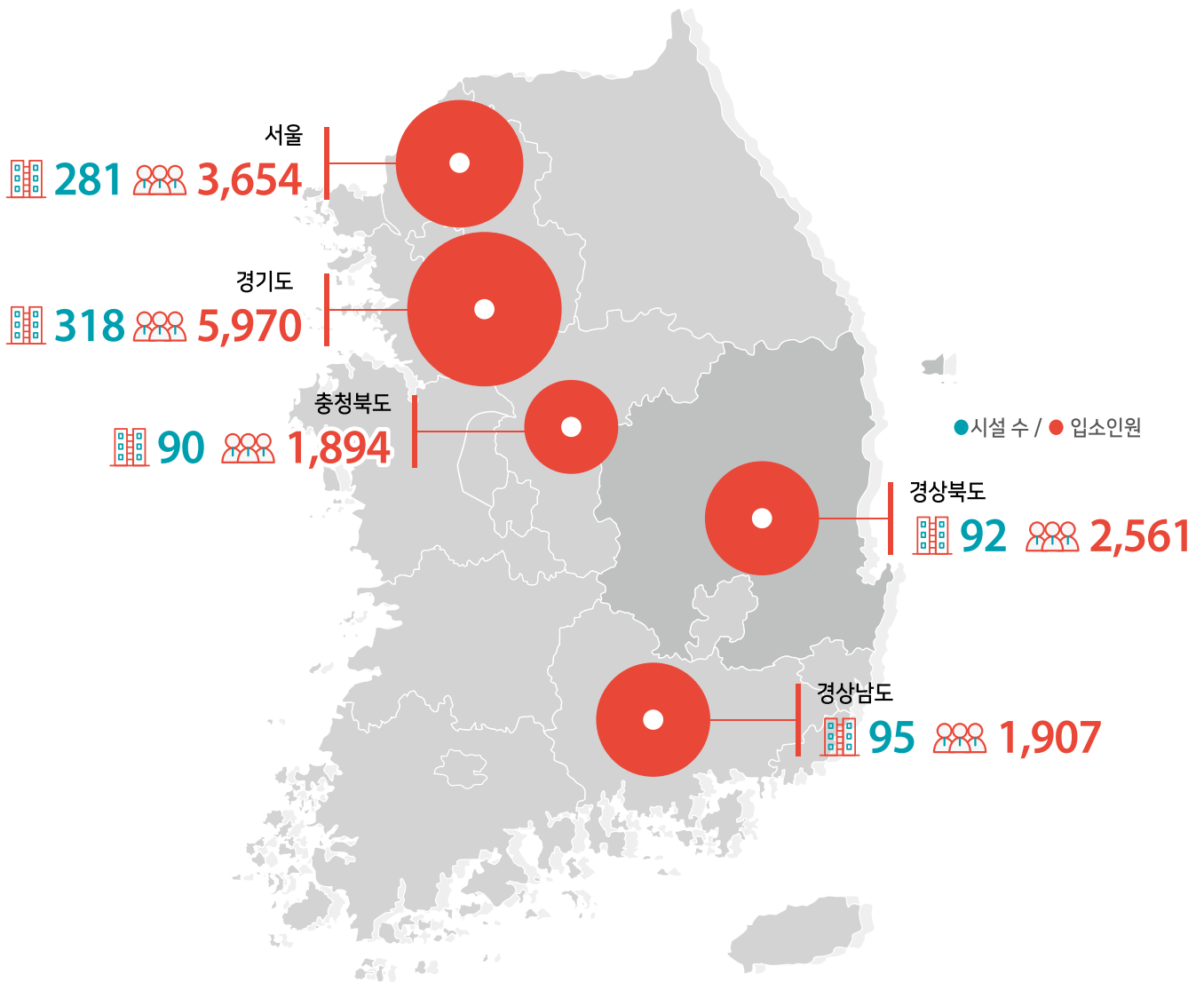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구분	시설 수
경기	318	강원	70
서울	281	전북	70
경남	95	전남	65
경북	92	충남	58
충북	90	대구	51
광주	77	제주	35
대전	75	울산	27
부산	74	세종	6
인천	73		

[표 1] 장애인 거주시설 수

구분	입소인원	구분	입소인원
경기	5,970	전남	1,357
서울	3,654	부산	1,343
경북	2,561	대전	1,190
경남	1,907	인천	1,028
충북	1,894	광주	960
충남	1,749	울산	656
전북	1,670	제주	578
강원	1,529	세종	163
대구	1,453		

[표 2] 장애인 입소자 현황



경북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현황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2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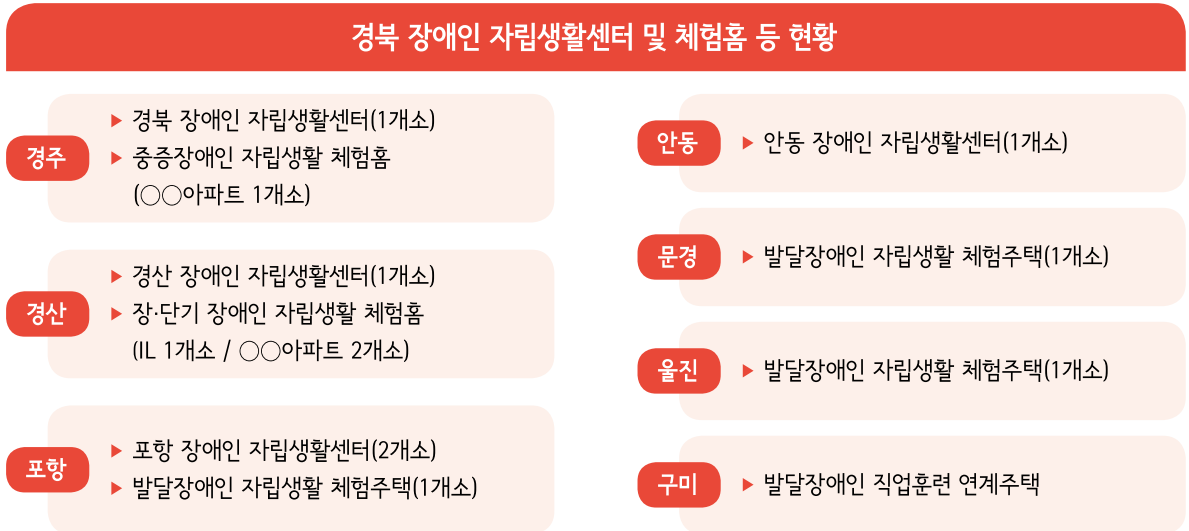


지적장애인 시설 990명

자료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복지 일람표(2019년 12월 말 기준)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수를 살펴보면, 취업으로 인한 퇴소는 서울 21명, 충북 10명, 인천 8명, 경북 4명, 대구 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숙인 생활시설은 경북은 4개소이며, 노숙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1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정신질환 27명, 지체장애 24명, 언어·청각장애 10명, 시각장애 2명 순으로 나타남.

3) 경북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자료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2020년)

- 경북 자립생활 정착금은 1인당 1천만 원으로 2019년에는 총 10명이 자립생활 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도비로 추진 중에 있음.

3. 타 시·도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및 종합계획, 전달체계

1) 자립생활 지원 관련 조례

- 자립생활 지원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대다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활동지원 추가 급여,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담고 있음.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2016년)는 자립생활 지원계획, 자립생활 실태조사,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초기생활 정착금, 주거 및 주택개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탈시설 및 자립사회 전환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요구됨.

조례 주요내용	지역명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으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주거 지원, 정착금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제주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 구성 및 운영	경기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020년 신설)	인천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서울, 충남
탈시설 계획 수립	부산

[표 3] 타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주요내용

2) 탈시설·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전달체계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타 지자체처럼 '경북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탈시설·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 1차(2013~2017년), 2차(2018~2022년)
- 대구 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 계획(2015~2018년)
- 광주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2017~2022년)
- 부산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2020~2024년)
- 인천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 지원 5개년 계획(2019~2023년)



탈시설 장애인지원 전담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경기도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탈시설자립지원팀(T/F)



[표 4] 타 지자체 탈시설·자립지원 종합계획, 탈시설 장애인지원 전담기관 현황

- 중장기적으로 집중력과 추진력 있는 장애인 자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전담팀 (기관) 설치'가 요구됨.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총 인원은 대구시·부산시·경기도·경상남도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북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위한 팀을 신규로 설치(팀장 1, 팀원 2) 또는 장애인 자립팀에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추가 배치(2명)가 필요함.

대구	부산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 수 20명 •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자립지원팀', 탈시설 자립 전담 공무원 3명 (팀장 1, 팀원 2) • 대구시 장애인 수 125,48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 수 25명 • '장애인 자립지원팀' 5명 (팀장 1, 팀원 4) 중 1명이 탈시설 자립지원 업무담당 • 부산시 장애인 수 175,3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 수 12명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3개팀(정책, 자립, 시설) • 경북 장애인 수 180,898명

- '장애인 인권 교육'이 외부 전문강사를 통해 필수교육으로 진행되듯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생활 이해와 정보'에 관해서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필수교육이 될 필요가 있음.

4. 타 시·도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1) 경제, 일상생활, 사회참여 지원

	구분	내용	
경제적 지원	초기 생계비	[서울] 1인 263천 원/월, 1년 지원	[인천] 1인 43만 원/월, 2년 지원
	전세주택	[서울] 150백만 원 이하(2인 이하)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전세보증금	[경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7천5백만~8천5백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최장 6년 동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경기] 장애인 매월 10만 원 저축, 경기도 매월 10만 원 1:1 매칭	
일상 생활 및 사회 참여 지원	추가 활동지원 시간 제공	[서울] 월 120시간, [대구] 월 40시간, [인천] 월 40시간, [광주] 월 60시간 차등, [경기도] 월 30시간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19,200천 원 실시 장애인복지사업 수행기관 4개소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직장체험 등의 주제로 사업 수행	
	기초생활 금융교육사업	[50+생활금융사회공헌단] 탈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초생활금융교육'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울]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인천]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자립희망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	[광주] 자립희망자 개인별 욕구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	
	자립역량 교육	[부산] 거주시설로 찾아가는 맞춤형 자립지원 교육	

2) 주거 지원

(1) 사례1 : 중앙정부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안)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개정 •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및 비품 등 지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확대 추진('18년 62개소 → '22년 90개소)
	②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기준 마련 및 체계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다양화 • 소규모 시설 전환 유도
	③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거급여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기준임대료 지속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2) 사례2 : 서울시

정책과제	세부과제(핵심 7, 신규 14)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지원 체계 개선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신규]
	② 탈시설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신규] [핵심]
	③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④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핵심] 가.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나.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 다.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신규]
	⑤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⑥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신규]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①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신규] [핵심]
	②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③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①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가.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신규] [핵심] / 나.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신규]
	②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신규]
	③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신규] [핵심]
	④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⑤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⑥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신규] [핵심]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①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신규] [핵심]
	②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신규]
	③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④ 탈시설 장애인 퇴소사 정착금 지원 확대
	⑤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신규]
	⑥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⑦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신규]

(3) 사례3 : 대구 남구

구분	주체	주요내용
참여기관업무 업무협약	통합돌봄팀	2019년 업무 협약 체결
주택확보	통합돌봄팀 LH대구경북본부 대구사회서비스원	전세임대주택 등 활용을 통해 주택 협조 및 확보(LH대구경북본부) 15호 / 주택 매입 1가구(구청/의료특화주거모델)
주거컨설팅 (자립주택)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컨설팅 / 무장애 거주공간 및 필요 보조기기 컨설팅
서비스 지원	통합돌봄팀 대구사회서비스원 LH대구경북본부	입주자 장애유형에 따른 리모델링 실시 /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시설 공사 및 임대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통합돌봄팀 대구사회서비스원	자기결정과 자립정착이 가능하도록 입주지원

5. 경북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체계 구축방안(안)

비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북

정책목표

장애인의 안정적·체계적인 자립생활 구축

전략과제

1 인프라 확충

- ① 「경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개정
- ② 「경북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 ③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공무원 충원
- ④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자립 교육' 필수화
- ⑤ 탈시설 전환 및 자립지원센터 설치

2 경제,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 ① 자립정착금 확대
- ② 초기 생계비 지원
- ③ 탈시설 장애인 자립키움 통장 사업 도입
- ④ 활동지원 추가급여 확대
- ⑤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제공

3 의료 및 건강 지원

- 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건강주치의 지원
- ② 검진비·치료비 지원
- ③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4 주거 지원

- ①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강화
- ② '경상북도도 LH와의 협약'을 통한 장애인 주거공급계획에 지자체 역할 강화
- ③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주거지원 및 서비스 공급 계획
- ④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자립지원 전문인력 교육 강화
- ⑤ 체험홈 및 자립지원주택 확대

※ 본 브리프는 경북행복재단(2020)에서 연구된 '경상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현황 및 체계 구축방안'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SPECIAL COMMENT

경상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현황 및 체계 구축방안



김미옥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이 연구는 장애인 자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우리 사회에서 경북의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방안에 공감하면서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탈시설 준비부터 유지에 이르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단계별 서비스가 필요

지역사회통합돌봄은 '탈시설 준비단계-지역사회 전환단계-지역사회 정착단계-자립유지 단계'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지원생활의 주체 기관 운영, 다양한 주거유형 지원 등 많은 고민과 제도적 장치, 장애인 당사자의 준비와 노력이 함께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과 보통의 삶(Ordinary life)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제도 구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그 목적과 이념에 맞게 설계되고 있는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도가 구현되고 있는 것인지 등 그 본질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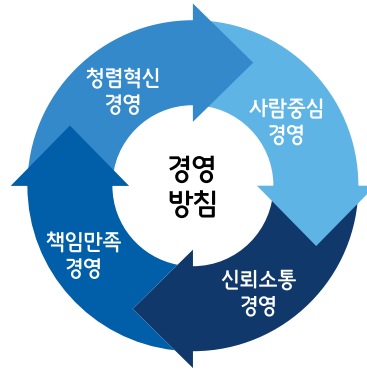
이 외에도,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행동(도전적 행동 등) 특성을 동반하는 장애인, 주거 지원 체계 및 서비스,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장애인의 조기노화에 지원 등의 많은 난제들이 있다. 이에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경북행복재단 미션 및 비전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MISSION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 지역 사회서비스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



경영목표 &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 •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 • 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 	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 • 컨설팅·평가·인증 • 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 • 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 • 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 사회 구축



2020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편집위원 김종필, 강민정, 김동화, 오난숙.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